

“현대차 불법파견 · 구사대 폭력 특별근로감독해야”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기자회견 열고 현대차 불법 행위 및 국가 방관 규탄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14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과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유린한 폭력 사태에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과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등 노동·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용 변호사는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공격하기 위해 ‘보안운영팀’이라는 이름의 구사대 수백 명을 동원했

다”며 “이것은 현대차가 20년 넘게 이어온 폭력적 노무관리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근로감독집무규정 제12조 제3호에 따라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81조가 금지한 불이익취급, 지배개입, 폭력행사를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30년 전 사라졌어야 할 ‘구사대’와 ‘백골단’이 아직도 울산에 존재한다”며 “정당한 노동행위를 폭력으로 막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야 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으로 이 문제의 단초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성훈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는 “현대차는 불법파견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처벌은 고작 벌금 3천만 원이었다”며 “불법을 덮기 위해 회유와 해고, 폭력까지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이 명확했음에도, 현대차는 업체를 폐업시키고 전원을 해고했다”며 “500명의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은 그 범죄의 연장이었다”고 분노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국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라며 “노동부는 재벌의 하수인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야 할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EU 공급망실사법 등 국제 기준은 모두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로 구사대 폭력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익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폭력은 20년 넘게 일상이었다”며 “그동안 경찰과 노동부가 이를 방치해왔다”며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투

쟁은 단순한 해고 문제가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구조적인 범죄행위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단 한 명이라도 불법과 폭력을 저지른 자가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구사대 폭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1,120명 시민청원서’를 서울고용노동청에 공식 접수했다. 이들은 “이번 청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고용노동부가 더 이상 재벌의 불법과 폭력을 방관하지 말고 즉각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복수노조제도 15년 평가 토론회에서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 촉구

금속노조가 15일 오후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시행 15년을 돌아보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질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제도 전면 폐지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소수노조의 교섭참여권 보장과 사용자 개입 차단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대성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발제를 통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시행 15년 동안 사용자의 개입과 차별이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었다”며,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권을 사용자 동의에 종속시키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교섭 사용자 동의권 폐기 ▲소수노조 교섭참여권 보장 ▲잡정합의안 찬반투표권 보장 ▲초기업교섭 활성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 전환 등 5대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이 개선안들은 소수노조가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교섭권 보장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각 지회 대표들은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한 발언자는 “교섭대표노조가 사측의 방침을 그대로 옮겨 적는 수준의 협약안을 제출한다”며 제도의 폐해를 지적했고, 다른 참석자는 “교섭권이 있어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행사할 수 없는 제도는 이미 노동권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소수노조 교섭권 보장과 사용자 개입 차단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금속노조는 2025년 상반기부터 진행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토론회를 금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추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